



2008년 3월,
20대 총여학생회 [틈을 누비다]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3월 7일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 행사
가부장제 사당을 아득까득 씹어먹으며
유인물과 함께 여성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요.

3월 10일 영화 <대지의 소금> 상영
미국 연방의회 도서관이 선정한 '후세에게 물려줄
소장영화 100편'에 선정된 '민중영화'의 고전.
1950년 뉴멕시코주 실버시티의 아연 광산에서 일어난
광부파업은 지리멸렬하게 끝나는 듯 보이지만,
가난과 성차별로 기죽어 살던 광부의 아내들이
파업을 승리로 이끈다.



감독 : 허버트 비버만/ 일시: 3월 10일 오후 6시/ 장소: 백양관 강당

3월 20일 강연 <88만원 세대의 연애법 - 프라다와 낭만적 사랑 사이>
연애가 바뀌고 있다?
연애를 구성하는 대학, 대학가를 구성하는 연애를 짚어본다.
강연자: 김신현경/ 일시: 3월 20일 오후 6시/ 장소: 추후공지

[총여학생회와 일일 만남]

공동체에서 느끼는 불편함들, 문제제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평등한 관계와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여성주의로 풀어내면 어떨까요?
우리의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여성주의 만남!
함께 읽을만한 재미있는 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무엇이든 좋아요.
02-2123-3645 혹은 action-fem@yonsei.ac.kr로 마주해요.^^

[주말 아롱아롱 만남]

여성주의로 이야기하는 공감의 자리가 열립니다.
일시: 3월 16일부터 매주 일요일 2시
장소: 학생회관 3층 왼쪽 끝 분홍색 문 총여학생회실
함께하실 분은 action-fem@yonsei.ac.kr로 이름,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2008.3.8 세계 여성의 날 100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00년 전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
5천여명의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광장에 모여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와는 1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와 미국과 한국이라는 공간의 차이가 있는 우리 사회
를 돌아봅니다. 지난 해 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사람
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지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않은 KTX 여승무원들의 투쟁,
겨울의 차가운 본관을 뜨거운 열기로 달궜던 연세대학교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투쟁. 그
녀들은 100년 전과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단 노동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여성들
만의 특수한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녀들에게 주어
졌던 비정규직, '가장'은 남성이라는 보편적인 편견 아래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이 당
연했던 사례들, 여성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부과되었던 '어떠한 방식'의 노동들.

이는 임금 노동을 하는 여성들로만 수렴할 수 없는 많은 여성들의 문제입니다. 직장예
서와 같이 신촌 거리에서, 강의실과 반방에서 성희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별로 인한
차별에 의해 승진을 할 수 없는 것을 '유리 천장'이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여학생이기에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추천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사회적인 문제
이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금-여기의 문제입니다.

여성이기에 감내해야 했던 차별, 여성적인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가치절하, 여성
들의 공간으로 간주되어 공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던 많은 '사적
영역'의 문제들. 오늘은, 이와 같은 여성 문제를 돌아보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20대 총여학생회
성큼 다가서는 일상의 여성주의 <틈을 누비다>

철페!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여성노동 괴롭히기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성별이분법과 임금 노동이 확고해짐에 따라 여성들의 노동은 철저하게 평가절하되고, 은폐되어왔다. 남성 주체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과 구분되어, 여성들은 사적인 공간이라고 규정된 곳에서 가사노동, 감정노동처럼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노동을 해왔다. 또한 남성중심적인 자본주의 사회는 여성의 노동에 대한 끊임없는 비가시화와 함께 여성들의 일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을 '일하지 않는 존재'로 낙인찍고, 이러한 낙인을 통해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들까지 '일 못하는 존재'로 내몰았다.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심지어 여성 상위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사회에서도 여전히 여성의 노동은 저임금 비정규 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들은 여전히 공사를 막론하고 감정노동과 가사노동의 압박 속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가부장적인 사회는 계속해서 이러한 여성들의 노동을 은폐하려 한다.

남성주체들은 가부장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재생산 노동을 여성에게만 부과한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의 재생산을 위해 여성을 '어머니'로 명명하여 아이를 낳고 교육시키는 존재로 규정했다. 또한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남성들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존재로써 여성을 '아내'로 명명하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여성의 몫으로 인식시켜왔다. 덕분에 여성들은 끊임없이, 쉽 없이, 또 너무나도 당연하게 재생산 노동을 요구받아 왔던 것이다. 공적인 영역에서도 여전히 남성 주체들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등의 감정노동을 여성이 수행해야 하는 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여성들을 다양하고 과중한 억압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사회의 가부장적인 시선들은 청소, 비서, 승무원 등 특정 직업들을 '여성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끊임없이 여성의 노동을 남성의 노동과 다른 것으로 구분 짓는다. 그리고 이를 저평가하면서 저임금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든다.

수많은 일터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성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60-70%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직장 여성의 64%가 성희롱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는 여성의 노동을 외면하면서도 끊임없이 착취하고, 가부장적인 사회는 여성 섹슈얼리티의 억압을 통해 자본주의의 착취와 공모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러한 이중억압 속에서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다. 노동이라는 것이 이 가부장적인 사회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은 역시나 섹슈얼리티의 억압과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단순히 여남의 임금을 동등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여성 노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며, 가부장제의 여성 섹슈얼리티 억압과 함께 문제제기 되어야 한다. 여성의 노동을 가시화하고, 그것의 정당한 평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여성도 돈 많이 벌고 싶으니, 여성이 하는 일을 높게 쳐달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껏 은밀히 또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던 자본의 여성 착취와, 교묘하고도 잔혹한 가부장제의 여성 억압을 밝히고, 남성중심적인 노동관을 뒤집으며, 노동을 통해 여성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긍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소위 명문대에 재학 중인 5학년 **씨. **씨는 요즘 집 안에서 뉴스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다. 뉴스만 틀면 그놈의 '알파걸', '골드미스'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집안사람들이 **씨를 닦달하기 때문. ** 역시 명문대생이지만 졸업 이후 취업은 막막하기만 하다. 교환학생도 갔다 왔고, 토플과 토익 점수도 꽤 나오고, 학점은 그리 낮지도, 높지도 않지만 그놈의 '여풍'은 부는 것 같지도 않다. 동기들을 보아도 거의 4점 만점을 찍는 극소수가 아닌 이상 다들 지원서만 가득한데, 알파걸의 등장과 함께 왠지 뒤쳐진 사람같이 보여서 기분이 상한다.

##씨는 요즘 걱정이 많다. 공무원 시험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는데, 군가산점제도가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나마 여성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취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군가산점제도가 부활되면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시험에서 군대에 갈 수 없는 ##씨가 불리할 것은 뻔하기 때문. 한숨만 나온다.

뉴스와 신문에 쉴 새 없이 등장하는 '알파걸'. 그런데 정작 내 주변에는....?

사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에 '큰' 반응을 보이는 현상은 이번 알파걸 신드롬이 처음은 아니다. 각종 고시 합격 비율에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여풍'이 신문의 1면을 차지하는 건 매 년 하나의 행사처럼 자리하고 있다.

알파걸 열풍은 생각보다 오래가는 듯하다. 심지어 알파걸의 존재가 여성우월시대의 도래를 알려준다는 알파걸의 두뇌구조를 분석하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으니.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오히려 **씨, ##씨와 같은 여학생들이 많지 않은가?

서울시 대졸자 여성의 취업률은 전년대비 66.7%에서 66.4%로 0.3% 감소, 같은 기간 남성 대졸자의 취업률은 71.9%에서 73.4%로 1.5% 증가하여 성별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서울시 대졸자 여성의 취업률은 OECD 평균 78.9%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낮다. 게다가 여성의 평균 임금 역시 남성 평균임금의 64.1%에 불과하고 이는 5년 전 여성 임금의 비율과 큰 차이가 없다. (연합뉴스-2008.1.14) 이는 소위 명문대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취업 전선이 나를 페미니스트로 만드는 것 같아."

취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학점을 따고, 교환학생을 갔다 오고, 토플과 토익공부를 하면서 '스펙' 넓히기에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학내 공간에는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이렇게 열심히 스펙을 넓혀서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는데 면접 질문에서는 성차별적인 말들이 난무한다. 이를 악물고 면접시간을 견뎌내고 취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여자라는 이유로 능력이 저평가되고, 성차별적인 직장 문화는 생리,출산,육아 휴가가 필요해도 눈치만 보게 만든다. 이런 현실에서 어떤 이들은 이런 말까지 한다. '취업전선이 나를 페미니스트로 만드는 것 같아.'

여성 노동권의 문제는 100년 전 공장에서 노동하던 여성들만의 사안이 아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노동에서의 차별적인 문제들은 100년 전보다 더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 노동권은 2008년, 3월 현재를 살고 있는 여성 모두의 문제이며 쟁취해 나가야 할 권리이다.

차별금지법, 이름대로 되거라!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한다는 취지 하에 사회적 약자의 법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한 법제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의 20가지 원인으로 고용, 교육, 사회적 서비스 등에 차별이 있을 경우 이 법에 의해 차별의 중지,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은 2007년 6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법무부에서 제정안을 준비하였고, 10월 입법 예고하여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타인을 차별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그럼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 '장애인의 의무 고용제 폐지'를 주장하는 전경련,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것을 그 종교의 당위라고 믿는 보수 기독교계, 그리고 그들과 손을 잡아야 하고 그 유착이 긴밀할수록 얻는 것이 많아지는 정계 등 이 시대의 권력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섬세한 로비와 직접적인 반대외의사의 표명, 그들간의 은밀한 동조와 합작으로 인권위 권고안에서는 고용 형태를 없애도록 했으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는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을 없애, 도합 8개 조항을 삭제해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어렵게 구성해낸 차별금지법안이 단 며칠만에 뒤집어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법무부에서 돌아온 구차한 변명은 '다른 13개 조항은 이미 다른 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7개 조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것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위는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무기력한 반응을 보일 뿐이었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된다면, 이는 '차별하면 안 되는 사람'을 보호하고 '그 외의 (삭제된 조항들에 해당되는)사람'을 정당하게 소외하는 법이 될 것이다. 이름만 '차별금지법'이지 실제로는 '차별조장법'인 것이다. 차별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여 '차별해도 되는 사람들'을 남겨놓는다면 이는 이 법 제정 자체의 목적, 헌법적 평등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지금의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차별항목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차별을 감내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더욱 새로이 만들어지는 법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핵심 내용이 삭제된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저 우리의 혈세와 사회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할 뿐, 그 의의를 살릴 수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없다.

이러한 쓸모없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저항의 움직임은 끊이지 않았다. 정부안에서 7개 조항이 삭제된다는 사실이 새나오자마자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공동행동'이 구성되어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10대에서 50대까지 모여 차별금지법 정부안의 부당함을 선전하였다. 길거리 캠페인과 촛불집회와 같은 대중행동을 만들었고, 보수 기독교계의 물지각한 행각을 비판하는 기독교인들과 연대하였으며, 끊임없이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법무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또한 삭제된 조항에 해당되는 각각의 차별에 총체적으로 반대하는 이들이 모여 '반차별 공동행동'을 설립하였다. 지금 이들 '반차별 공동행동'은 이미 실효성을 잃은 정부안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신 지금 정부안에서는 삭제된 7개 조항에 두 가지 항목을 덧붙여 총 22개 항목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새로운 안을 국회에서 발의했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재계의 압력에 밀려 없어진 '고용 형태'와 포괄적인 성적 지향이라는 말로 포섭될 수 없는 '성별 정체성'의 항목이 추가되어 교묘하고 세밀한 차별에 반대하게 될 것이다.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에서 차별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악의적으로 차별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 차별 철폐라는 목적에 실질적인 힘이 실리도록 하고자 한다.

차별에 반대하는 것은, 특정한 '나쁜 차별'을 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함이 아니다. '건강한 몸'을 규정하여 그렇지 않은 몸이 함께 살아가기에 불편해도 괜찮은 사회, '정상성'을 규정하여 '비정상'을 만들어내고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도 정당화되는 사회,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도, 이해하지도 않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가 나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상성'을 무기로 지금도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우리'의 범주를 만들어 그 외의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악습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법제도로써 보장될 수 있는 일차적이고 실질적인 평등마저 박탈당하는 이 사태에, '평등의 가치'는 헌법에 적힌 허울좋은 단어에 불과함을 확인하며, 그것을 손에 잡히는 힘으로 바꾸기 위하여 여성주의자로서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군대 문화와 '군가산점제'



한국 사회 내에서 군대 문화의 영향은 지대하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군대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 일상생활 속에도, 수업 시간에도, 심지어 친구들과의 시시콜콜한 대화 속에도 군대 용어나, 군대식 놀이 등이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기소개를 위해 FM을 한다거나, 시험 날을 '격전의 날' 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이 아주 일상적인 부분에도 군대문화는 존재한다. 이처럼 군대 문화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대한 발언권은 언제나 '군대를 갔다 온 남성'과 '군대를 갈 수 있는 남성' 만이 가지고 있었다. '신체 건강한 젊은 남성'과 '그랬던 적이 있는 사람' 만이 군대 문화의 주체로 고정되어 왔고, 군대문화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군대 문화의 주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권이 된다. 또한 '징병제'라는 한국의 특수한 군대 문화 하에서 가부장적인 남성 주체들은 자신의 군대 경험을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재현해 내면서, '나는 가기 싫어도 가는데, 왜 너희들만 안가냐' 라는 논리로 군대에 가지 않거나 군대에 가지 못하는 비남성적 존재들을 차별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를 통해 군대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은폐시키며 결국 군대를 가야만 하는 남성들의 희생과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만을 가시화한다.

군가산점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군대를 갔다 온 남성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만으로 군대를 가지 않는, 가지 못하는 여성이나 장애인 등 비남성적 존재들을 명백하게 배제하는 것이다. 타인을 차별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획득하려는 전형적인 남성 주체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군대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군대라는 남성중심적인 문화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그 중심에 포함되지 않는 타자들을 배제하는 식으로 자신의 특혜를 강화하는 가부장제의 논리는 최근 군가산점제의 부활을 정당화하는 근거들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군대를 갔다 온 남성들이 설자리가 없다"는 것과, "2년씩이나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군대에 갔다 왔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 는 식의 이야기들은 이것이 한국의 군대 문화와 특성이 가지는 남성중심성과 차별논리를 또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미 군가산점제는 '한국 사회의 군대 문화'가 가지고 있는 명백한 차별성 때문에 1999년 위헌으로 판결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산점을 2%로 낮추고, 전체 합격자 가운데 가산점자를 20% 범위로 제한한다는 요지의 군가산점제 부활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또 그 근거들이 이전의 차별 논리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한국 사회가 군대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한국의 가부장적인 사회가 이러한 한국 군대 문화의 남성중심성을 비남성적인 존재를 차별하는 것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 안보'라는 미명아래, 군대와 징병제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숨겨져 왔고, 군대의 존재 자체가 가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되지 않고 있다. 징병제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 국가에 의한 강요로 인해 군대가 어떻게 병폐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조작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단지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으로 그러한 징병제에 대한 문제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존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군대에 대한 불만은 여성, 장애인, 군대에 가지 않는 비남성적 존재들을 공격하며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핑계로 또 위대한 희생이라는 거짓말로 끊임없이 군대라는 공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국가에게 따져야 할 일이다.

껍데기뿐인 낙태 논의에 반대한다.



정부가 낙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낙태와 관련된 오래된 논쟁이 다시금 불붙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 14조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강간, 준강간 또는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혹은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외의 이유로 낙태를 할 경우 낙태죄를 물어 금지하며, 낙태를 시행한 의료인 역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그러나 한 해 시행되는 34만 여건의 낙태 중 95%는 불법낙태임을 생각해 보았을 때 현행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은 명확하다. 따라서 대부분 시행되는 낙태의 실질적인 이유인 미혼 임신, 사회경제적 이유 등을 낙태의 허용범위 안에 포함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추진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법률이 현 시대를 반영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상의 허용범위를 논의하는 것은 여성의 몸과 결정권을 존중하는 낙태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기 위한 1차적인 방법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허용범위를 국가가 정하는 것은 결국 여성의 몸과 몸에 대한 결정권을 '법'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국가의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권 통제는 국가의 권익에 따라 여성의 몸을 이용하는 행태이다. 이는 여성의 몸과 경험을 존중하지 못하는 반인권적인 행위이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사회경제적인 기반은 마련하지 않는 것 역시 이러한 사례 중 하나이다. 낙태 허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과 상통한다. 낙태는 임신한 여성의 상황을 기반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국익을 위해 획일적인 기준으로 통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국가의 허용 범위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범죄가 되어버리는 낙태에 대한 담론은 지양되어야 한다. 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비롯하여 피임에 대한 결정권, 성적 결정권 등을 포괄하는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 없이 낙태만을 논의할 경우 다양한 범주에서의 여성의 결정권은 드러나기 힘들다. 그렇기에 낙태의 허용범위에 매몰된 현재의 논쟁을 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성/피임지식 교육에 대한 보장, 여성의 몸을 존중하는 상담과정을 통한 낙태 및 출산의 결정권 보장, 출산을 결정했을 때 산모와 아이가 사회/경제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등의 논의가 필수적이다. 낙태와 출산의 당사자이며 결정권자인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재의 낙태 논의는 껍데기밖에 없다. 껍데기는 집어치우고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한, 당사자에게 와 닿는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는 유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여성부를 존치시키기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맡아 왔던 가족 및 보육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이관되고 여성부는 여성정책을 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월 16일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여성부로의 통폐합한다는 것보다는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거듭된 입장 변화는 그 내용을 떠나 차기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한낱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평등 정책은 긴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이 여성의 정치·경제적 참여와 의사결정권, 소득 수준 등을 평가하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여성권한척도 조사에서 93개국 중 64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사회·제도적으로 성평등하지 못하다.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의 문제는 언제나 사적 영역으로 치부됨으로써 비가시화되었고, 공적영역에 이야기될 때조차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성평등 정책을 통해 다른 부서들에 성인지 관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 독립적이고 영향력 있는 부서는 필수적이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제도 시행, 성평등교육 등을 전담하는 여성정책 전담부서는 지속, 강화되어야 한다.

이제껏 여성가족부는 여성할당제나 캠페인 등을 통해 기존의 부서들이 할 수 없는 성평등 정책들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가족과 보육에 관련된 정책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성평등한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놓친 측면들도 있다. 이는 남성들에게 신사도를 발휘하라던가, 늑대가 일부일처제를 강조하면서 직장 남성들에게 성매매하지 말 것을 권유하였던 '화이트 타이' 캠페인에서 드러난다. 신사도는 여자를 보호 받아야 할 존재로 가정하고 있고, 남자는 이를 지켜줘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기 때문에 성차별주의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일부일처제를 강조하는 가족주의는 성매매를 "여성"의 입장에서 보지 못하고 "가족"의 입장에서 보게 한다. 이는 보수 진영의 "성매매는 가족을 파괴하는 부도덕한 것"으로 보는 입장과 별 차이가 없으며 성매매 여성의 인권은 보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성매매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하는 지점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섹슈얼리티 억압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여성부는 가족이나 복지의 영역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 재생산, 성폭력과 같은 여성이기에 겪는 문제들에 있어서도 성인지 관점의 확산과 성평등 정책을 계획·집행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하는 노동자 여성이 겪는 임금 문제와, 출신국가가 '제3세계'라는 이유로 타자화 되고 성차별로 더욱 쉽게 인권이 유린되는 이주여성의 문제, 성소수자임과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이중억압을 겪고 있는 성소수자여성의 문제, 여성적인 몸이 아님을 이유로 섹슈얼리티가 삭제되는 장애 여성의 문제, 성매매 여성 문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여성부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수위원회의 여성부 통폐합,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 정부개편안이나 작년 총학생회에서 총여학생회를 폐지하고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총투표 발의 모두 성차별에 대한 고민 부재 속에서 나온 점이라는 데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올해 초에는 여학생처의 모든 업무는 학생처로 넘어가고, **성폭력 상담실을 리더십 개발원 아래 있는 상담센터의 부속 기구로 옮기는 조직개편안**이 학교당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나오기도 하였다. 일단은 현재 이사회를 8월 이전에는 열 수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될 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학교당국이 여성문제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알 수 있다. 이러한 학교 당국의 안일함에 비판하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을 촉구한다.